

은퇴 이후 생활비 3.3억 부족... 예·적금 만으로 마련 어려워

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① 왜 지금 '노후 재테크' 인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노후 재테크'가 중요해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은퇴 이후 30년에 달하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연금제나 예·적금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소득 수준, 적정 생활비 등을 고려해 어떤 투자전략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장수하는 것이 리스크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아 놓은 돈은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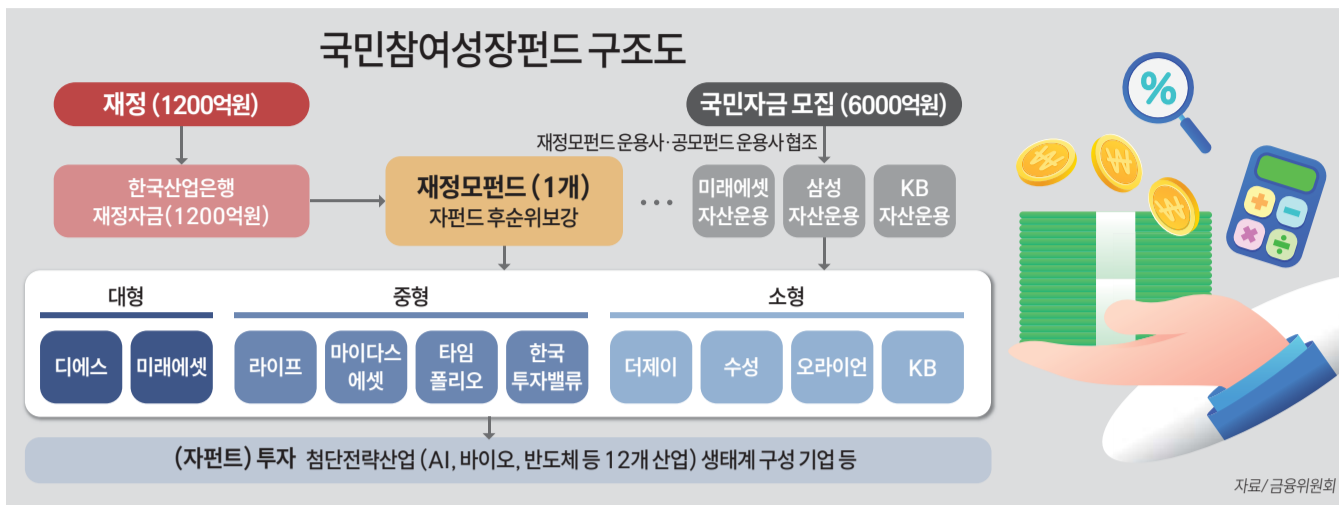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이지만 선풍 투자하기가 겁난다. 은퇴자금이어서 위험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100세시대가 현실화하면서 노후 자금 마련이 모두의 화두가 됐다. ‘건강이 돈’이라는 말도 많이 회자된다. 오래사는 것이 리스크가 된 현실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7세다.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의 66.7세와 비교해 16.7년 늘었다. 2024년부터 만 60세가 된 국민의 기대여명은 남자가 23.7년, 여자가 28.4년이다. 법적 정년인 60세를 고려하면, 길게는 30년이 넘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 길어진 노후, 재정부담도 커졌다

국민 대다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를 주요한 노후수단으로 꼽지만, 올해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지급액은 69만8000원에 불과하다.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합쳐도 104만7700원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이 조사한 기대 노후생활비인 197만 6000원(1인 가구 기준)과 비교해 약 91만원 가량 부족하다.

평균적인 수준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30년의 노후를 가정한다면, 노후생활비의 부족분은 약 3억2800만원이다. 은퇴 이전부터 예·적금, 채권, 주식, 펀드(집합투자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자산을 증식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노후 재테크’가 중요해진 배경이다.

과거 1990~2000년대에는 은행권 예·적금 수익률이 연 10% 이상이어서 예·적금 만으로도 자산증식이 가능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와 금리 하락으로 예·적금 금리도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취급된 정기예금(1년 물, 단리)의 평균 취급금리는 연 2.8%다. 지난 2025년 물가상승률(2.1%)과 비교해 0.7%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자소득세를 고려하면 체감 수익률은 연 0.59%에 불과하다.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비(非)예금성 금융자산에 적극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 자산시장 정책 재편... 쉬워진 투자

예·적금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자산시장 투자를

은퇴 이후 기대수명 30년 달해 금투세 폐지 등 정부서 투자 독려 주식·펀드 투자시 ISA 개설 유리 22일 출시 ‘국민성장펀드’ 주목 소득공제에 원금손실 20% 보전 20~30대, 고위험 상품 투자 적절 중·장년, 안전-위험자산 분배 필요

독려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4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전격 폐지됐고, 올해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분리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시행됐다.

주식·펀드 등 상품에 투자한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우선 개설하는 것이 좋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 가능한 ISA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최대 연 400만원(서민형 기준)의 투자소득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ISA계좌의 혜택을 강화한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도 출시된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국민성장펀드’

도 주목할 만 하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국가가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개인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최대 20%까지 보전하며, 투자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1인당 투자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됐다.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퇴직연금(DC형·개인형 IRP),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간접 투자’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해당 상품들은 ETF(상장지수펀드), 펀드, 리츠 등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하며,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만큼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은 합산 연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만큼 우선해서 적립 및 운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세대별 ‘분배전략’ 중요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선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자산의 위험도를 분배해야 한다.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20~30대 청년세대라면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적극 투자할 수 있지만, 40~60대의 중·장년이라면 안정적인 자산 구축을 위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은퇴 이후에는 안전자산과 월 소득 중심으로 자산을 재편하는 것이 좋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병이나 재난 등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은퇴를 전후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다면 배당 중심의 ‘고배당주’ 중심의 투자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고배당주는 연 배당률이 주가 대비 5% 이상인 주식을 말한다. 분기·반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만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며, 기대수익률도 은행 예·적금보다 높다.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 증식도 기대할 수 있다. 통상 수익이 안정적인 은행주와 일부 대기업 주식이 고배당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국내 상장사들이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분기·반기 배당을 정례화 하면서, 고배당주 투자도 주요한 투자 전략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국내 고배당주에 분산투자하는 ETF 상품도 출시해 판매 중이다. 국내 주식은 배당 시기가 2월·5월·8월·11월로 일정한 편이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배당 시기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는 만큼 분산 투자 시에는 매달 배당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 시중은행의 자산관리전문가(PB)는 “은퇴까지 시간이 많은 청년세대는 손실이 발생해도 만회할 시간이 많은 만큼,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은퇴가 가까워지는 중·장년층이라면 자산을 중위험 상품과 원금보장형 상품에 분산 투자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동성이 충분하다면 수익률이 안정적인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예대금리차 확대’ 가계 소비여력 제한 우려

5대은행 예대금리차 평균 1.512% 지난해말 1.261% 대비 0.25%p ↓

가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예대금리를 웃돌면서 소비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평균 1.512%를 기록했다. 지난해말(1.262%)와 비교하면 0.25%포인트(p) 확대됐다.

가계예대금리차는 은행이 가계에 대출해 줄 때 받는 금리(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예대금리)의 차이를 말한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예대금리를 웃돌면서 금리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는 3월 기준 연 4.19~4.33%이지만 지난해 말 3.99~4.30%로, 상단은 줄었지만 하단이 0.2%p 상승했다. 반면 예대금리(1년 만기)는 지난해 말 2.87~2.95%에서 같은 기간 2.85~2.97%로 소폭 변동에 그쳤다. 대출금리는 상승한



반면 예대금리는 제한적인 변동에 그치면서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가계예대금리차 확대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가계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매판매액지수가 한달새 11.3% 상승하며 소비는 외형상 회복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물가가 2.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대비 2.3% 오른 뒤 ▲1월 2.0% ▲2월 2.0% ▲3월 2.2% ▲4월 2.6% 상승했다.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 폭은 제한적이라 분석이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4월 기준 2.9% 수준을 유지하며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 부담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이어지면 향후 소비 회복세도 제한적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확대는 은행 수익성에는 긍정적이지만 가계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8만명 넘어서

국토부, 지난달 855건 최종 가결 LH, 피해주택 누적 8357가구 매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국민이 누적 3만8000명을 넘어서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에서 총 20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 누적 개최 횟수는 100회에 달했다.

가결된 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66건은 이의신청으로 추가 요건이 충족된 사례다. 74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도 가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8503건이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가결 비율은 61.0%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67건이 결정됐다. 정부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6만3568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

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8357가구를 집계했다. 올해 들어 3360가구를 매입하며 월평균 매입 건수는 840가구를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매입건수는 655가구였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정한다.

정부는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 대위변제 후 피해자가 최대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함께 잔여채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자세한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